싼 가격·정 있는 거래·걷는 즐거움…시장만의 매력 사라져

광주 전통시장 쇠락 이유는?

광주 전통시장 경기 체감지수 36.7로 전국서 가장 낮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미흡 청년몰 육성 등 젊은세대 치중 시장의 주 고객 고령층은 소외 굳이 전통시장 가는 이유 없어

광주의 전통시장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민들의 소비 위축에 시설 미비, 온라인 거래 급증, 경쟁력 있는 콘텐츠 미흡 등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쇠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저렴한 가격, 정감 있 는 거래, 걷는 즐거움 등 전통시장만이 가진 매력 이 점차 사그라지면서 굳이 광주의 전통시장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청년, 관광객 등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이 효력을 나타내기도 전에 주고객인 중년층, 노년층이 전통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도 전통시장 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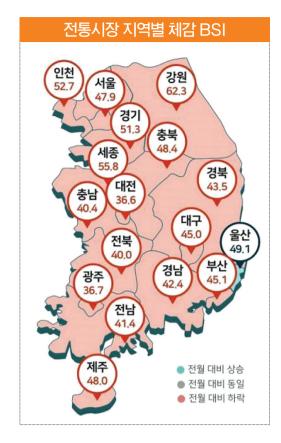
여기에 온라인 거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위생에 대한 경각심 미비, 주차장·화장실 등편의시설 부족 등까지 겹치면서 전통시장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통해 의미없는 시설 보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색을 가미한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을 돕고, 중년층 이상을 위한 시설 정비 및품질 서비스 개선 등 '집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는 전국에서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전통시장 장기침체가 예견된 만큼 광주시나 각 자치구가 대책역시 시장 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단기와 장기로시기를 구분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수립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주로 전통시장 예산은 시설 개보수에 집중됐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와는 관계없는 형식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 내 화장실 위치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양동복개상가의 경우 방문하는 소비자의 80~90%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지만, 시장 내 화장실 12곳이 모두 3층에 있어 계단으로 오르내리거나 인근 건물 또는 인근 시장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시의 지원 방안들이 젊은 세대, 관광객 유입에 치중되면서 전통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년층 이상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광주시는 공모사업 외에도 지역 전통시장 활성 화를 위해 '야시장 기획', '청년몰 육성사업', '디 지털 전통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등에 집 중하고 있으나 지역 전통시장에서 젊은 세대 유입 을 위한 먹거리, 선술집 등 기본 인프라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젊은 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SNS 맛집 유 치, 디지털 교육을 통한 상인 역량 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

광주시가 진행하는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소상공인 워크숍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전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성화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고물가 안정을 위해 내놓은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카드'가 대표적이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등은 지류·모바일 가맹점포 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연로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 탓에 등록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거래 및 대형 유통업체들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무리해 적용하기 보다는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가진 공간, 저렴하게 믿고 살 수 있는 공간, 독특한 먹을거리가 있는 위생적인 공간, 주변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한 복합 공간 등으로 전통시장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창호 양동복개상가 대표는 "양동시장을 놓고 보자면 광주천 재생 복원을 통해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며 "광주천은 양 동시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자연친화적 문화생태 공간인데 악취와 더러움으로 어느 누구도 찾지 않 는다"고 비판했다.

이명근 양동 건어물시장 상인회장은 "형식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마케 팅에 변화를 주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선호하 는 젊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며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유통매체를 따라가기 보다는 전 통시장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와 인프라 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결 정치 반복되면 미래 향해 나아갈 수 없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대화·합의 통해 의사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 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 아간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더불어 정무장관을 부활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 소통을 통해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 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 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막해다

윤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해보니 안타까운 점이 적지 않았다"며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위험 요인도 복잡하고 달라졌는데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 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 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기정통 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을 지시했다.

아울러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 차, 휴대전화와 같이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 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 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 인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 ···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10년간 지정 기관서 의무복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 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 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 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법안의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